

文 흠집내기 대선정국 조기 가열 최순실 총공세

새누리 “회고록 진실 안박히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 추진”
더민주 “미르·K스포츠 의혹 특검·국조 모든 수단 동원”

여야가 현안 이슈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면서 대선 정국이 조기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회고록 파문을 고리로 안보 이슈를 부각시키며 야권의 잠룡들 가운데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최순실씨 비선실세 의혹과 우병우 민정수석을 타겟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일 최고위원·총진 연석회의와 ‘문재인 대북결핵 요청사건 진상 규명위원회’ 등을 열고 문 전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당 진상규명위원장인 정갑윤 의원은 연석회의에서 “여러 장면에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란 게 증명되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결재를 받아 결의안에 기결한 게 사실일 가능성은 99.9%”라고 주장했다.
유기준 의원도 “지금 혼란스런 사태는 국민이 문 전 대표의 위기관리능력, 리더의 자질, 국가관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문 전 대표가 빨리 공방을 마치는 방법이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태도로 계속 가면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가 끝까지 당시 상황을 소상히 해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기록물 공개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연발 정국을 겨냥

한 쟁점으로 부상시키려는 차원이 아니라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유력 주자인 문 전 대표에게 치명타를 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해명까지 요구하며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당내 특위를 구성하고 특검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등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최근 불거진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묻히지 않기 위해 여론전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전반적인 민심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특혜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력전을 펼쳐 여권을 몰아붙인다는 태세다.
더민주도 이날 ‘최순실 게이트·편파기소 대책위’를 꾸리고 첫 회의를 가졌다. 추미애 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했다. 대한민국이 최순실 모녀에게 상납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모른 채하고 있다”면서 “검

찰의 편파기소와 국정 농단에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이 침묵할 수록 의혹만 더 커진다”며 “국민적 의혹에 답변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증거인멸하기 딱 좋은 시간인데 ‘세월아 네 월야’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박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며 전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거론한 데 이어 이날 특검의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김동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가 계속 후진하는데 박 대통령은 비선 측근들을 감싸면서 국민적 의혹을 덮으려고만 한다”고 비판했으며 주승용 의원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민주 ‘최순실 게이트’ 대책 회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선 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대책위’ 첫 회의에서 이번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했다. /연합뉴스

與, 다시 계파갈등?

비박계 “최순실 의혹 풀고야야”...친박계 “말려들면 안돼”

새누리당이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 계파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비주류 일각에서 조속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나서자 주류가 이에 반발한 것이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최고

위원·총진 연석 간담회에서 최씨 모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소개한 뒤 “이혹들이 하루속히 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도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면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가 불лак을처럼 모든 현안을 빨아들었다”면서 “그런데 집권여당인 우리 당이 이것을 앞장서서 막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국민에 엄청난 실망을 줬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막는다고 막아질 게 아니다. 빨리 털고 갈수록 대통령의 부담도 덜고 남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에 출연 “권력 남용이나 비리가 있었다면 그건 최씨뿐 아니고 누구든지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이 정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찰에 계신 분들 정선 차리고 잘(수사)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류 측에서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에 대한 방어막을 쳤다.

친박(친박근혜)계인 김태흠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 “대통령과 최씨가 과거에 친분이 있다고 해서 이를 무슨 권력형 비리라고 대통령, 현 정권과 연결지으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철저한 수사를 해서 국민께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드러난 부분은 말 그대로 의혹이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러면 수사에 맡기는 게 도리이지 국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기싸움

국회 토론회...운용 방식, 누리과정·법인세 입장차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나고 예산심의 기간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19일 예산 관련 쟁점 사항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이 이날 국회서 개최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모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 규모와 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여야 간사들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에서부터 극명하게 엇갈린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올해 초과세입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일부를 우선 집행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국가채무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두면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최대의 재정을 투입한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2년 연속 3%대의 예산증가율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살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예산”이라

며 “전반적인 세원 확충방안 없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다 보니 ‘재정의 역할’을 상당부분 포기하고 실현 가능성이 작은 중기계획으로 귀착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문제도 쟁점이 됐다. 주광덕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회복기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태년 의원은 “근본적인 세입 확충방안 없이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의 제1 원칙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고소득자·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강화’를 꼽았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했다.
주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가 증가해 누리과정의 재원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지원은 필요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국고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손학규 오늘 정계복귀 공식 선언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2년 이상 강진에서 집거해온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0일 정계복귀를 공식 선언한다.
지난 2014년 7·30 경기 수원 병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다음날인 7월 31일 정계은퇴를 전격 선언한 지 2년3개월만이다.
손 전 대표의 한 측근은 19일 “20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계복귀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계에 복귀하더라도 손 전 대표는 당분간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지 않고 제3지대에서 중도개혁세력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세력을 구축한 뒤 대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영춘 ‘핵연료에 세금 부과’ 개정안 발의

원자력발전에서 사용되는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사용하는 핵연료 가액의 10%를 원전 소재지 시·도에 내도록 했다. 현재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ℓ)당 475원, 천연가스는 킬로그램(kg)당 60원, 유엔탄은 킬로



그램(kg)당 24원 등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핵연료에 대해서는 과세 규정이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사용한 우라늄의 가액은 8000억여원으로, 앞으로가동될 원전까지 고려하면 향후 핵연료세는 연간 1000억원 이상 걷힐 것으로 김 의원은 추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4.7% ~ 4.9%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